

“공권력 앞세운 정치 않겠다”

노 대통령, 북핵 등 국정 현안 강한 해결 의지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세계 한인 지도자 340명을 초청해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방향으로 한 발씩 나아가고 있다”며 국정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하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권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확립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필요할 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발언 요지.

“참여정부 들어 북한 핵문제가 걱정이었는데, 지금 가는 과정보다 더 좋은 과정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의 결의의 자세가 이런 상황을 조성했다고 믿는다. 잘 가고 있고 잘 가리라

믿는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 과정에서 옥신각신하고 다툼과 시끄러움이 있을 수 있으나, 해결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

카드채나 금융불안도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꺼번에 수술하면 위험해진다고 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 외국자본의 증시유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증시가 미래의 기대척도라고 하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실물경제가 어려운데, 경기의 흐름이고 소비금융을 너무 많이 일으킨 데다 상당히 많은 부동산금이 부동산에 몰려 경제를 교란한 측면이 있다. 언제든지 불경기는 해소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문제는 불경기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었다. 경기는 시장 원리로 회복되지만 성장잠재력 훼손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처했다. 이 문제도 옥신각신하고 하루빨리 해결 못해 국민과 국회의 꾸중을 들었지만 채택방도에 대한 다툼은 없었다.

대통령선거 때 정당을 매개로 국회를 지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대통령제와 비슷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정당과 국회의 질서가 바뀐다고 국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검찰을 지배하는 것에는 국민들이 수십년 동안 반대하고 중립과 독립을 요구했다. 그 결과 검찰이 독립하기가 수사의 영역이 없어지고 정치권도 공격을 받자 국정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렇다고 한국의 전체적인 국정질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검찰이 국정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도 독립과 중립을 지킬 충분한 자질이 있다. 신뢰를 해야 한다.

새로운 질서를 수용하기가 대통령인 저도 힘들지만 과도기적 질서로 이해해 나가자. 힘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진짜 국가가 혼란스럽고 위험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국민들이 위임한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겠다.

20년 정치를 하면서 원칙을 반드시 지켰다. 이익 때문에 타협해서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이제 공권력을 앞세운 정치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 확립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뀌 나가야겠다는 심정을 헤아려달라.

25일 ‘공직자와의 온라인 대화’

노 대통령, 5급 이상 공직자와 직접 의사소통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6개월을 맞는 오는 25일 제2차 ‘공직자와의 온라인 대화’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들과의 직접 의사소통을 통해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IT 마인드를 공유하고 열린 국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참여범위도 1차 ‘인터넷 조회’ 때의 중앙부처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넓어져 참여인원은 1,073명에서 총 1만5,000여명으로 늘었다.

이번 온라인 대화는 행정자치부

정부 전산관리소 주관 아래 정부고속망을 기반으로 시행되며, 지난 13일 공직자들이 대통령에게 질의할 수 있는 게시판이 행사 홈페이지에 개설돼 간접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게 됐다.

미디어홍보비서관실은 “이같은 행사가 거듭되면서 이제까지의 ‘집합식 월례조회’가 사라지고 ‘온라인 의사소통’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참여인원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익보다 냉전논리 택해야 하나

대구 U대회 성공개최 기틀 다진 '유감' 표명에 흑백논리 들이대서야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민간단체가 8·15 행사에서 북한 인공기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불태운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각과 이를 둘러싼 첨예한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논란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북한의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 4대 경험 발표 통신문 교환 등 남북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다시 살려내는 기폭제로 작용했지만, 일부에선 결과와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남북이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체제로 살아오면서 숙명처럼 겪고 있는 한국적 현실이자 극복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비판을 인정한다해도 유감 표명을 "북한의 억지 주장에 한국의 대통령이 무릎을 꿇은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일보 8월 20일자 사설) "노 대통령이 보수파를 때리고 친북 세력을 복돋우는 북한 전략에 힘을 실어 준 결과"(중앙일보 8월 20일자 사설) 등으로 해석하고 "이 정부의 대북·대미 인식과 정책이 언제까지 이런 유(類)의 표류를 거듭할 것인지 걱정스럽다"(조선 사설)는 식의 비판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편협하고 무책임한 시각이 아닐 수 없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고민을 하등 고려하지 않은 이같은 냉전논리는 설득력도 없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만 끼칠 뿐이다.

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결단'이었다. 자칫 '반쪽' 대회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다시 화해 분위기로 바꾸기 위한 통과의례의 성격이 강했다.

만에 하나, 북한의 불참이 현실화될 경우를 가정해보자. 당장 대구지역 시민들

을 비롯한 국민들이 큰 상실감을 겪을 뿐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코앞에 다가온 '6자 회담' 등에 끼칠 악영향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지도자가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실익도 없는 대결논리에 사로잡혀 무작정 대치국면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였을까.

지금 우리에게선 상대방을 인정하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남북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감 표명에 따른 결과는 고려하지 않은 채 흑백논리의 잣대만을 들이대 '북에 굴복했다'고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대안 없이 남북의 불화만 조장하는 아마추어식 접근일 뿐이다.

“푸대접론으로만 지역 희망 없다”

노 대통령, “근거에 기반한 지역 경쟁력 강화 나설 때” 강조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감정 문제에 대한 솔직한 소회를 피력했다. 19일 대구·경북지역 언론인과의 합동인터뷰 자리에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지역화합과 관련한 구상을 소개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상세하게 지역문제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문제를 고려해서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지역문제 해결책”이라며 별도의 지역감정

해소책은 갖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특정 지역의 소외감, 지역 갈등, 지역감정 등은 정치인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92년 이전 30년 동안 대구 출신의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가의 자원을 주무를 때 진짜 호남을 소외시켰는가. 인정하지겠는가. 그 30년 동안 대구·경북이 부자가 됐으

면 얼마나 부자가 됐고 덕을 봤는가”라며 “이에 솔직히 대답할 수 있어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제가 민주당인데도 호남에서 호남 푸대접론을 계속 얘기하는데 푸대접론 100번 얘기해도 노무현은 단돈 10원 더 줄 돈이 없다”며 “호남 소외론에 대해 무슨 소리를 해도 저는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고, 영남지역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푸대접론과 관계없이 낙



대변인 Q&A (요약)

“대법관 임명 충분한 의견수렴 거칠 것”

▲ 노무현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문제와 관련, 오늘 저녁 법무부 장관, 변협 회장과 만찬을 한다. 아마 22일 대법원장이 직접 제청하기 전까지 오늘 자리와 내일 여러 통로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다.

▶ 오늘 의견수렴 하는 것은 세 명 중에 한 명에 관한 것일 텐데, 그 세 명에 대한 총체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가?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다.

▶ 세 명을 후보군으로 놓는 것인가? 그렇다.

▶ 지금까지 정해진 방침은?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오늘 아침에 문재인 수석이 그 부분을 각별히 강조했다.

지금부터 시작해 내일까지 검토해서 모레 제청이 들어오면 그때 결정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 오늘 법무부 장관, 변협 회장 만나고 추후에 누구를 만날 지 계획은 있나? 그런 계획은 따로 없다.

▶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어떤 것을 듣는 것인가?

전반적인 상황과 여러 의견을 들어볼 것 같다. (8월 20일 오전)



제1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2의 과학기술 입국’ 실현방안 토론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위원들과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과 ‘제2의 과학기술 입국’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 장관·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위원 14명과 민간 위촉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99년 3월 ‘과학기술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해 발족했으며 참여정부 들어서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회의.

이날 회의에는 연구원들도 함께 참석해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과 ‘2003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결과’가 안건으로 상정돼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03년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결과’와 ‘2003년도 민·군 겸용기술 사업 시행계획’ 등의 안건이 서면보고 된다.

행사 후 노 대통령은 선이 없는 캡슐형 내시경, 프레온 대체물질, 인조다이아몬드 등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주요 연구성과를 둘러보고 연구원들도 격려할 계획이다.

3면서 이어짐

후된 곳이라는 분명한 계량적 근거를 갖고 해나갈 것”이라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간) 경쟁, 그 지역의 전략적 기획역량과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지원율) 결정하는 만큼 근본적으로 지역의 경쟁력 있는 문화를 새롭게 창조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대구·경북이 소외됐다, 호남정권 시절에 소외됐다고 하는데, 대구에 투자된 섬유산업 지원액 3,670억원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그만큼 집중투자를 받은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30년 그 막강한 권력이 있는 동안 대구가 왜 서울이 되지 못했느냐”며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어떤 정권이 어느 한 지역을 그렇게 지원하고 소외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소위 푸대접론을 백년 말해봤자 그 지역에 새로운 희망은 생기지 않는다”며 자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